

금남로에서



정 후 식
논설실장·이사

“어른이 없다.” 언제부터가 지역사회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어른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다 자란 사람’이나 ‘나이나 지위나 항렬이 높은 윗사람’으로 풀이한다. ‘한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어른은 맨 마지막 의미일 것이다.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전통이 희미하게 남아 있지만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우대받거나 존경받기를 기대하긴 힘든 시대다. 원로의 권위는 무너진 지 오래다. 경험과 지식의 전수를 인터넷이 대신하고 공동체보다 개인이 대세인 시대다. 지난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어른 없는 시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93%에 이르렀다.

광주의 의인 홍남순·조아라

상황이 이러한지라 지역 현안이 형용어진 실태처럼 얽혀도 마땅한 조정자가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대중의 의식을 이끌어 줄 정신

그 시대엔 ‘어른’이 있었다

적 민주주는 보이지 않는다. 부조리와 부당함에 맞서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원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어른이 없다’는 말은 이런 세대에 대한 아쉬움이 담긴 탄식이다.

그 시대엔 어른이 있었다. 이 땅의 민초들이 서슬 퍼런 독재의 탄압에 신음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절, 그 대열의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고 흥남순 변호사와 조아라 여사가 대표적이다. 두 분의 삶은 달은꼴이다. 1912년 같은 해에 태어나 일제 치하와 군부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지는 질곡의 현대사에서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대변하며 90여 평생 동안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실천했다. 말보다 온몸으로, 청빈한 삶으로 어른다운 삶을 보여 준 ‘시대의 의인’이었다.

지난달 14일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흥 변호사의 1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흥 변호사는 ‘어둠의 시대에는 법보다 양심이 앞선다’는 신념으로 양심수들을 위해 60여 건의 무료 변론을 펼친 1세대 인권변호사였다. 1965년 대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 1973년 합성지 사건, 1976년 3·1 국구선언 명동 사건, 1978년 교육지표 사건 등 시국 사건 법정에는 어김없이 그가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때는 수습대책위원으로 계엄군의 광주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해 ‘죽음의 행진’을 이끌었고 신군부에 의해 무기 정역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이후에도 광주민주화운동 위령탑 건립 등 5·18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1986년에는 전남 민주화복 국민협의회를 결성

해 6월 항쟁을 이끈 국본(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조직적 토대를 제공했다.

조아라 여사 역시 여성과 소외 계층을 대변하고 민주화·인권 운동에 헌신한 사회운동가였다. 1931년 수피아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신사참배 및 창씨개명 거부와 관련 두 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광복 이후에는 광주YWCA 총무·회장을 거쳐 명예 회장으로 물러날 때까지 40여 년 간 여성운동을 주도했다.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성빈여사와 아간 중학교인 호남여숙, 청소년 야학인 별빛학원,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계명여사를 잇따라 세워 여성 교육을 선도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도왔다. 5·18 당시에는 흥 변호사와 함께 수습 대책 위원으로 활동하다 계엄군에 끌려가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출감 후에도 부상자와 유가족들을 돌보는 데 힘써 ‘민주화 운동의 대모’ ‘광주의 어머니’로 불렸다.

방치된 지역 민주주의 역사

지난 주말 흥남순 변호사 자택과 조아라 여사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소심당(素心堂) 조아라 기념관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사직도서관 아래, 그가 좋아했던 백일홍 정원과 함께 조성돼 있었다. 유물 전시관과 사진 전시관에서는 그의 생전 모습과 활동을 사진과 유품을 통해 생생히 만날 수 있었다. 광주YWCA는 기념관 건립은 물론 생애를 재조명하는 연극을 2일 무대에 올리는 등 기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광주시 동구 궁동 15-1번지 전남 여고 건너편에 위치한 흥 변호사의 자택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낡은 건물 지붕에는 새는 빗물을 막기 위해 장판 조각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회색 천막이 씌워진 채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반세기 가까이 마당을 지켰을 은행나무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이 집은 1953년 그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거처로 삼은 이후 ‘민주사랑방’으로 불렸다. 박정희 독재 정권 반대 투쟁의 호남 거점이었고, 5·18 때는 항쟁과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문병란 시인이 ‘취영송’(欸英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숨 쉬는 민주주의 대법정’이라고 노래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 집은 흥 변호사가 타계한 이후 후손들이 빛을 못 이겨 제 3자에게 이전됐고 지금은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해 ‘의인(義人) 흥남순’ 기획 시리즈를 통해 그의 삶을 재조명하며 자택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행히 광주시가 지난 9월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안내문 하나 없고, 복원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곳을 역사적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민주의 집’으로 복원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어른 부재의 시대에, 지역의 큰 어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삶을 기리고 되돌아보며, 세 시대의 어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은편칼럼



심 상 돈
동아병원 원장

지난 7월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병원이자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병원 내 환자안전, 특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노령 환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시민단체의 노력과 검찰의 수사로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결정적 증거인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한 직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하지만 CCTV 영상 폐기 지시를 고발한 공익제보자가 광주시의 담당 공무원 파견을 통한 특별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다른 직원들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사직을 결정하였다 한다. ‘비판적 사고’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며, 2차 대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의 미래

전 후 나치 전범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말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게 한다.

광주시는 시립 요양병원과의 법적 협약을 해지하고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특별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신규 수탁자와 인수인계 때까지 투병하고 합리적인 병원 운영과 인수인계 시 적극 협조할 것,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해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시의 특별 지도 감독 업무에 차질 없이 협조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달 들어 광주시는 시립 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을 운영할 새로운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을 시민회에 제출하였다. 올해 안으로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296개 병상과 263개 병상 규모로 1998년과 2002년부터 민간 위탁자가 운영을 하며 정신장애와 치매노인 등에 대한 진료와 치료, 교육 등을 해왔다.

새로운 위탁자로 누가 선정되든 먼저 병원 내 인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 요양시설 내 중요 장소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의 실질적인 배치와 활동이 있어야 하며 요양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있어야 한다. 모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일들이다. 아무리의

학적, 윤리적, 경제적으로 건강한 민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하여도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환자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문제와 시립병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공공의로 사업을 빠른 시기에 해결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눈치를 봐야 한다. 현행의 료체계 내에서는 어쩔 수 없다. 또한 한층 강화될 거라 생각되는 광주시의 지도 감독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며, 감독의 강화가 의학적 판단의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군데도 여러 운데 두 군데의 눈치를 보려면 쉽지 않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료만으로는 병원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광주시 지도 감독에 따른 공공의로 사업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자칫 잘못되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만일 저자가 발생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감축, 시설 확충 등은 피할 수 없으며 공공의로에 관한 사업이 종료 포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커질 위험도 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지난달 “이번 시립병원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공공의로 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시립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병원 혁신 TF팀’을 구성해 혁신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환자의 진료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공공의로에 대한 부분은 광주시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최소한 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민간 위탁 사업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맡아야 한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광주시가 시 의료원의 형태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다. 광주시와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이 모여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고용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환자의 인권을 포함한 안전,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낮은 의료 수가를 비롯한 현행의 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에 대해서도 공과대가 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광주시가 병원을 직접 운영한다 해도 병원의 경영상 적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산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직접시병원도 포괄수거제를 시행하며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의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기 고



김 호 정
농사랑 알리미 강사 3기 회장

로컬 푸드가 뿌리 내리려면

는 적격재 장터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이 찾고 있다. 그런데 요즘 유행 따라 매장이 확대되면서 로컬 푸드 직매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 퇴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로컬 푸드는 식생활 패턴이 변한 현재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 ‘착한 사업’이다. 이는 안정적인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중요하며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식생활도 경제 발전과 더불어 변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쌀이 국민 1인 열량의 50% 정도를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2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에 축산물과 유지류의 공급 비중은 11%에서 22%로 늘어났다. 그 결과 환경 문제와 만성 질환,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문화된 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겠고, 이 때문에 친환경 먹거리 사업(로컬 푸드)이 조망받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대박 난다는 이유 하나로 너도 나도 뛰어들다는 데 있다. 이런 욕심은 결국 부실한 유사 직매장을 만들 것이고, 신선한 먹을거리보다는 이익 창출에만 눈을 돌리게 되면 소비자에게 실

패한 사업으로 각인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로컬 푸드란 매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산자 이름으로 직접 재배한 신선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와 나누는 곳이다. 다시 말해 무·저농약으로 키운 친환경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먹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로컬 푸드는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불신 사회를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걸게 하고 있다.

로컬 푸드 사업은 소비자의 건강과 먹을거리 확보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신뢰를 저버리면 절대 안 된다. 지금보다 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인증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정부는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직매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먼저, 법적인 정의가 뚜렷한 직매장 인증 제도와 관련 법을 마련하고 유사 직매장 인·허가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관여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판단 직매장이라는 현판을 내걸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자생 능력을 앗아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방적인 행정 개입보다는 생산자가 어떤 경우에도 신선택한 로컬 푸드 사업이 공해하 한다는 대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로컬 푸드 매장을 방문한 경험에 비추 봤을 때 도처럼 도농(都農) 단 상생의 구원투수로 선택한 로컬 푸드 사업이 최초 율가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다. 물론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최선을 노력을 하는데 지나친 우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社 說

광주의 공지 타이거즈 우승 ‘모두가 웃었다’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 우승 컵 들어올렸다. KIA는 그것же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외의 5차전 경기에서 이범호의 한국시리즈 통산 첫 만루 홈런에 힘입어 두산을 7-6으로 꺾고, 지난 2009년 이후 8시즌 만이자 통산 11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1차전을 내주고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한 양현종의 후투에 힘입어 2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것이 우승의 전기가 됐다. 1991년 프로 입문 이래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도 단 한차례 우승을 맛보지 못했던 김기태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누구보다 감격했을 선수는 바로 1981년생 동갑내기인 김주찬과 이범호였다. 김주찬은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린다운에 걸리고도 천금 같은 결승 투구를 올렸다.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던 이범호는 결정적인 때 만루홈런을 날렸다. 두 선수에게는 생애 첫 한국시리즈 우승의 감격을 맛보기까지 17년이

란 시간이 필요했다.

올 시즌 타이거즈는 팀 자체 한 시즌 최다승인 87승을 달성하면서 광주 시민들을 야구장으로 불러 모았다. 챔피언스필드 개장 첫 100만 관중 돌파라는 기록도 세워졌다. 광주시 인구가 150만 명이니 단순 계산으로 광주시 인구 75%가 야구장을 찾은 것이다.

KIA는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 때부터 출근 광주를 연구지로 사용했다. 해태로 상징되는 타이거즈는 KBO리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이었다. 팀의 승리와 맞물려 광주 시민들의 자긍심도 함께 올라갔다. 타이거즈는 단순한 야구팀이 아니라 광주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다. 타이거즈 경기를 보며 팬들은 지역 자부의 울분과 5·18의 아픔을 달래었다.

그리고 이제 촛불 혁명으로 암흑의 세월을 겪어 낸 지금, 타이거즈의 화려한 부활은 일상에 지친 지역민들에게 큰 활력이 됐다. 또다시 울려 퍼진 호랑이의 포효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희망의 서곡이 되었으면 한다.

지방 분권, 자기 재정 확충이 관건이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 전남도가 지방 소비세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소득세 증가분에 대한 공동세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지방세 비중 확대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해 ‘재정 분권’부터 이뤄야 한다는 요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다시 6대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세 확대만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레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가 큰 데다 세원 또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다. 실제 지방세 75조5000억 원 중 수도권이 55%인 41조3000억 원을, 비수도권이 45%인 34조2000억 원을 가져가고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지방소비세 배분 때 민간 최종 소비 지출에 3단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도권에 52%, 비수도권에는 48%가 분배되고 있고 지역 간 이동성 때문에 수도권이 이점으로 유리하다. 반면 지역 내 총생산(GRDP) 총액을 기준으로 5단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수도권 47%, 비수도권 53%로 비수도권이 유리하다는 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지방소득세도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증가분의 50%를 공동세로 만들어 17개 시·도에 균등 배분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복지 비용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은 날로 커져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체의 재정을 살찌우고 자율성을 키워 주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조카가 하나 있다.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정부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 왔던 아이인데 최근 공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모임에서 “우리 친인척 중 누가 ‘빡’이 가장 좋으나”고 물었다. 모두가 한순간 머쓱해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빡’이 이 슈가 됐다. ‘빡’은 영문 ‘백 그라운드’(Back Ground)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연출’과 뒤에서 돌봐 주는 ‘배경’을 일컫는 말로 해석되고 있다. 한때 이번 국

백그라운드

의 가슴은 멍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강원랜드를 비롯한 공공기관 인

사·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검찰도 수사에 나선다나 다행스럽다.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국가 위업 사무를 맡은 공직 유관 단체 등이 다 해당된다.

1년 전 촛불을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간 우리 국민은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원했다. 다시는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공기업 등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길 기대해 본다. /최원일 정치부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투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